

3.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7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2. 15.
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운 영 위 원 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시범 운영 후,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조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- 나. 관계법령 : 불임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등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
자료 수집·분석·조사· 및 의정활동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정책지원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(이하 “소관 의원”이라 한다)의 지휘를 받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<u>의정자문위원 운영 및 공무</u> <u>국내·외 의정 연수 등 소관 의원의 정</u> <u>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</u></p>	<p>제6조(정책지원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4조(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) ①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적용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